

대안적(보완적) 사회지표 개발

김 유 선

2011. 12.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대안적(보완적) 사회지표 개발 : 고용부문

2011. 12

연구책임자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 출 문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안적(보완적) 사회지표 개발 : 고용부문」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김유선

차 례

제1장 머리말 / 1

제2장 고용의 양 지표 / 2

- 1. 실업률 2
- 2. 고용률 3
- 3. 실제(체감) 실업률 4
- 4. 노동투입량 5

제3장 고용의 질 지표 / 7

- 1. 고용안정성(근속년수) 7
- 2. 비정규직 16
- 3. 임금 22
- 4. 노동시간 33

□ 참고문헌 37

표 차례

<표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추이	12
<표2> 인적속성과 일자리속성별 근속년수 평균과 분포	14
<표3>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19
<표4>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
<표5>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구성 차이	21
<표6>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임금격차	22
<표7> 연도별 임금수준 추이	27
<표8> 피용자 보수총액 대비 통계별 임금수준 추이	28
<표9>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추이	31
<표10> 주당 노동시간 추이	34

그림 차례

<그림1> 연도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1970~2010년, 단위:%)	2
<그림2>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4
<그림3> 연도별 노동투입량 추이	6
<그림4> 근속년수 평균값	8
<그림5> 장기근속자 비율	9
<그림6> 단기근속자 비율	9
<그림7> 장단기 근속자 비율	10
<그림8> 비정규직 규모 추이	17
<그림9> 피용자보수와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추이 비교	26
<그림10> 연도별 임금수준 추이(단위: 천원)	27
<그림11>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추이	29
<그림12>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30
<그림13>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32
<그림14> 연간 노동시간 추이	33
<그림15> 주당 노동시간 분포	35

제1장 머리말

-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양극화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기존의 공식 통계로는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많다.
-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3.4%(2010년)로,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완전고용 상태다. 이처럼 공식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다 보니, 고용통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첫 번째 노동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경직적인지, 그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한 적이 없다.
- 제2장에서는 고용의 양(실업률, 고용률, 실제 실업률, 노동투입량), 제3장에서는 고용의 질(고용안정, 비정규직, 임금, 노동시간)과 관련된 공식 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의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 어느 하나의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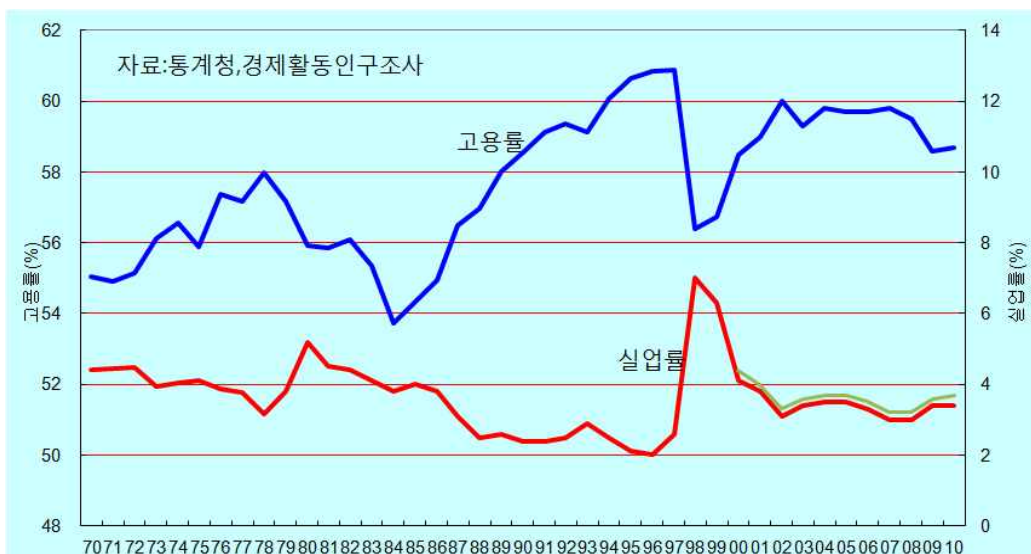
하고 분석해야 좀 더 심층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2장 고용의 양 지표

1. 실업률

- 외환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2002~10년에 3.0~3.5%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1> 연도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1970~2010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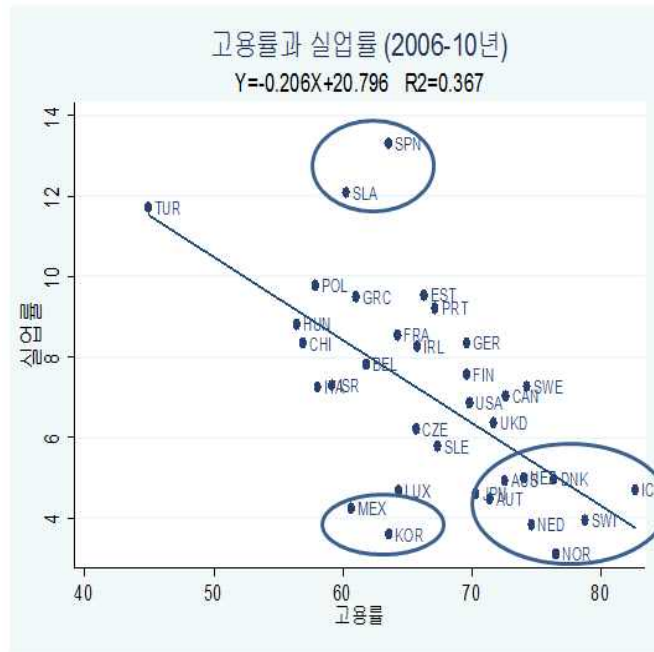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공식 실업률이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불신이 널리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1) 고용률 사용, (2) 실제(체감) 실업률 추계, (3) 실업률 조사방식 개편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 고용률

-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함께 국내외에서 공식지표로 사용해 왔다. 과거에는 이들 지표 중 실업률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고용률을 더 중시하고 있다.
- 실업률은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계산하지만, 고용률은 ‘ $\text{취업자} \div \text{15세이상생산가능인구} \times 100$ ’으로 계산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고용률이 56.4%까지 떨어졌다가 2002년에는 60.0%까지 개선되었다. 참여정부 때인 2004~7년에는 59.7~59.8%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10년에는 58.6~58.7%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체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고용사정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1> 참조).
- OECD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국제 비교할 때 ‘15세 이상’이 아닌 ‘15~64세’로 대상을 한정한다. 주요 국가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2> 참조).
- 노르딕 국가는 고용률은 75.8%로 가장 높고 실업률은 5.5%로 가장 낮다. 고용사정이 가장 양호하다.
- 한국은 고용률이 63.6%(23위)로 중하위권이지만, 실업률은 3.6%(2위)로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다. 이에 비해 스페인은 고용률이 63.5%(24위)로 한국과 같지만, 실업률은 13.3%(34위)로 가장 높다. 즉 한국과 스페인은 고용률은 같아도 실업률은 극과 극이다.

<그림2>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3. 실제(체감) 실업률

○ 공식 실업률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1월 취업애로계층을 발표했다.

- 2011년 공식 실업자(실업률)는 76만 명(3.0%)이지만, 정부가 정의한 취업애로계층(실업자,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구직단념자)은 142만 명이며, 이들 모두 실업자로 가정하면 실업률은 5.6%가 된다.

<표1> 실업자와 취업애로계층

	수(천명)			실업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실업자	889	920	855	3.6	3.7	3.4
36시간미만 취업자	3,110	3,617	4,534			
* 추가취업희망자	510	419	358			
구직단념자 ¹⁾	162	220	211			
취업애로계층	1,561	1,559	1,424	6.4	6.2	5.6

- 정부가 정의한 취업애로계층이 실업자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구직단념자 대신 취업준비생과 ‘60세미만 쉬었음’ 응답자를 포함시켜 사실상 실업자(실업자,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취업준비생, 60세미만 쉬었음)를 정의하기도 하고,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대신 ‘18시간 미만 취업자’를 포함시켜 사실상 실업자(실업자,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비생, 60세미만 쉬었음)를 정의하기도 한다.

- 2011년 현재 사실상 실업자1은 285만 명(실업률 10.7%)이고 사실상 실업자2는 366만 명(실업률 13.7%)이다.

<표2> 사실상 실업자

	수(천명)			실업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 1)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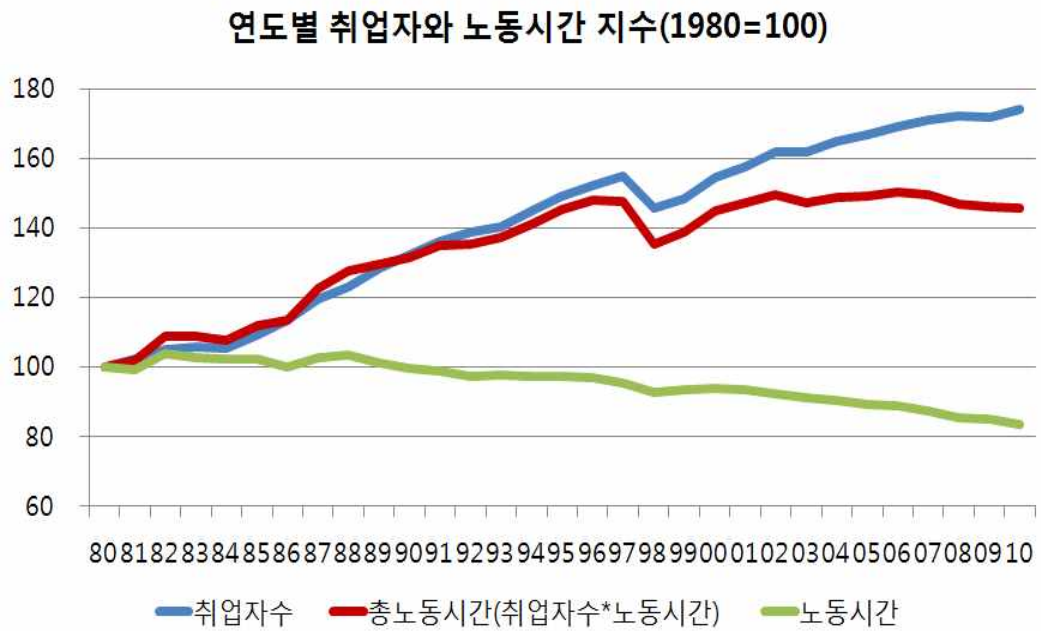
실업자	889	920	855	3.6	3.7	3.4
36시간미만 취업자	3,110	3,617	4,534			
* 추가취업희망자	510	419	358			
18시간미만취업자	963	1,056	1,168			
쉬었음(60세미만)	1,019	968	1,063			
취업준비	591	625	572			
사실상 실업자1	3,009	2,932	2,848	11.6	11.1	10.7
사실상 실업자2	3,462	3,569	3,658	13.3	13.5	13.7

- 황수경(2011)은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실제(체감) 실업률을 감성적 지표라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행 공식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설문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노동투입량

- 2000년대 들어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3> 참조).
- 하지만 노동투입량 즉 총노동시간(취업자수×노동시간)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으리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 취업자와 노동시간 이외에 노동투입량 즉 총노동시간(취업자수×노동시간) 지표도 계속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림3> 연도별 노동투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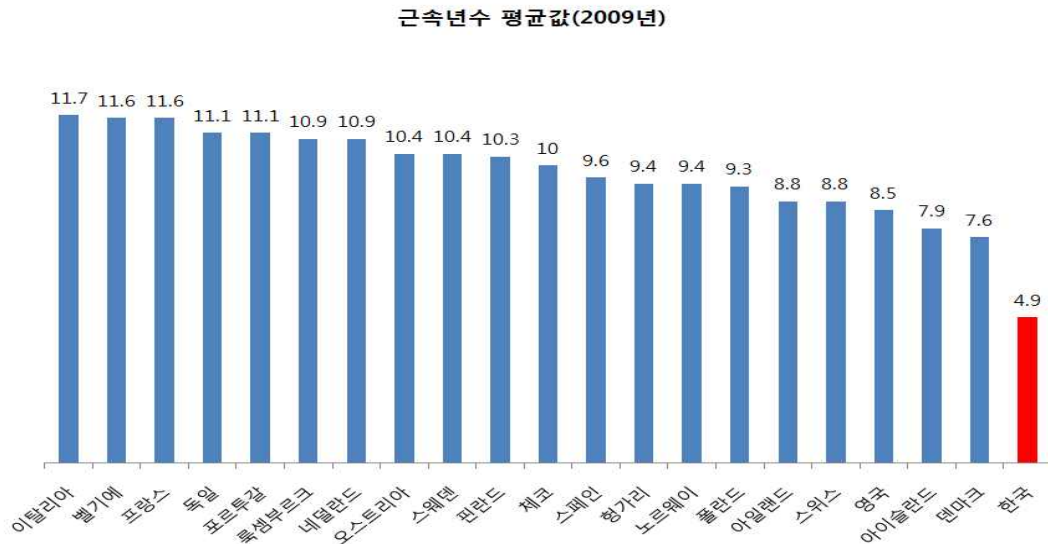


제3장 고용의 질 지표

1. 고용안정성(근속년수)

-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근속년수 평균값을 주로 사용하지만, 근속년수 중위값과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로 활용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선 근속년수 통계를 그다지 활용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KOSIS에서 근속년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 ~ 2011년 8월)에서 계산한 고용형태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분포(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정도 사용하고 있다.
- 근속년수 평균값과 장기근속자 비율, 단기근속자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용안정 실태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평균 근속년수는 4.9년(2009년)으로, OECD에 자료를 제출한 21개 회원국 중 가장 짧다. OECD 평균은 9.7년이고, 이탈리아(11.7년)가 가장 길다(stats.oecd.org). OECD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국은 6.6년(2000년)이고 일본은 10.1년(2008년)으로 한국보다 짧은 나라가 없다(정이환·김유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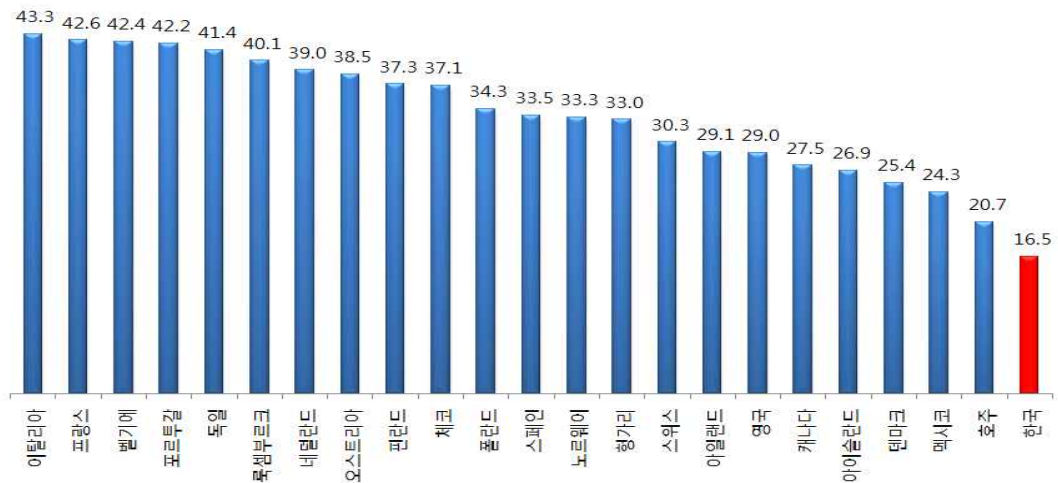
<그림4> 근속년수 평균값



- 둘째, 한국은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 비율이 16.5%(2009년)다. OECD에 자료를 제출한 23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비율로, OECD 회원국 평균(33.4%)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탈리아(43.3%), 프랑스(42.6%), 벨기에(42.4%), 포르투갈(42.2%), 독일(41.4%), 룩셈부르크(40.1%)는 장기근속자 비율이 40%가 넘는다.
- 셋째, 한국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이 37.2%로 23개 회원국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17.0%)의 2배가 넘는다.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비율이 36.7%로 가장 높지만 단기근속자 비율은 9.6%로 가장 낮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은 주중 근무시간만 짧을 뿐 장기근속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림5> 장기근속자 비율

장기근속자비율(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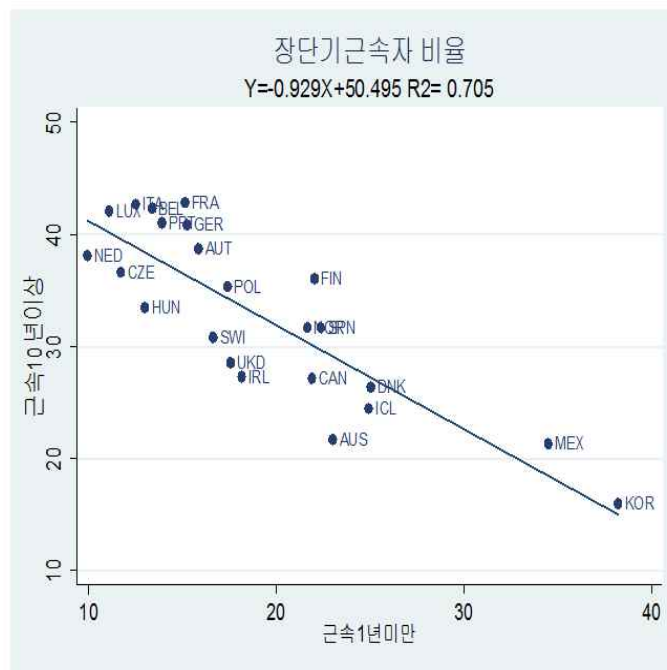
<그림6> 단기근속자 비율

단기근속자비율(2009년)



-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은 평균 근속년수 4.9년, 장기근속자 비율 16.5%, 단기근속자 비율 37.2%로, 3개 지표 모두 OECD 최하위다. 한국은 장기근속의 나라가 아닌 ‘초단기근속’의 나라이며,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다.
- 횡축을 단기근속자 비율로 하고, 종축을 장기근속자 비율로 하여 OECD 회원국의 장단기근속자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과 멕시코는 장기근속자 비율은 가장 낮고 단기근속자 비율은 가장 높은 ‘초단기 근속’ 유형에 속한다.

<그림7> 장단기 근속자 비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근속년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 임금노동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2001년 4.35년에서 2011년 5.10년으로 지난 10년 동안 0.75년 증가했고, 중위값은 1.5년에서 2.0년으로 0.5년 증가에 머물렀다.
- 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7.56년에서 8.02년으로 0.46년 증가했고, 중위값은 4.75년에서 5.17년으로 0.42년 증가에 머물렀다. 게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1.7~1.9년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2.1년으로 조금 증가했다. 중위값은 매년 0.58년과 0.67년을 오가며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표3>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추이

연월	평균값			중위값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1.8	4.35	7.56	1.80	1.50	4.75	0.58
2002.8	4.32	7.59	1.81	1.50	4.67	0.67
2003.8	4.39	7.70	1.73	1.50	5.25	0.58
2004.8	4.41	7.68	1.83	1.58	4.83	0.67
2005.8	4.52	7.95	1.84	1.67	5.33	0.67
2006.8	4.51	7.75	1.86	1.58	5.17	0.67
2007.8	4.60	7.78	1.91	1.67	5.00	0.67
2008.8	4.76	7.92	1.86	1.83	5.25	0.67
2009.8	4.88	8.22	1.78	1.83	5.42	0.58
2010.8	4.95	8.08	1.88	1.92	5.33	0.58
2011.8	5.10	8.02	2.10	2.00	5.17	0.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호.

○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로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단기근속자와 장기근속자 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근속년수 평균값은 남자(6.2년)가 여자(3.6년)보다 길고, 연령계층별로는 45-54세 연령층(7.8년)이 가장 길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7.2년)이 중졸이하(3.2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산업별로는 사회서비스업(7.1년), 제조업(5.8년), 생산자서비스업(5.1년), 유통서비스업(4.7년), 기타재화생산(3.2년), 개인서비스업(2.9년) 순이고, 직업별로는 사무직(7.2년), 관리전문직(6.5년), 생산직(5.1년), 서비스판매직(3.4년), 단순노무직(2.2년) 순이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0년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2.3년으로 규모별 격차가 크다. 노조유무별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근속년수가 11.6년인데 비조합원은 8.4년이고, 노조

가 없는 사업장의 비조합원은 3.6년이다. 정규직(8.0년)과 비정규직(2.1년), 정형근로(6.6년)와 비정형근로(2.2년), 상용직(7.3년)과 임시직(2.1년), 일용직(0.4년) 사이에 근속년수 격차도 크다. 임금계층별로 고임금 계층은 평균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데, 저임금 계층은 2년이 채 안 된다.

-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 비율은 남자(23.6%)가 여자(10.6%)보다 많고, 연령계층별로는 45-54세 연령층(30.8%)이 가장 많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27.3%)이 중졸이하(10.6%)보다 2배 이상 많다. 산업별로는 사회서비스업(26.2%), 제조업(20.8%), 생산자서비스업(17.3%), 유통서비스업(16.5%), 기타재화생산(11.8%), 개인서비스업(8.7%) 순이고, 직업별로는 사무직(27.3%), 관리전문직(23.5%), 생산직(18.7%), 서비스판매직(10.2%), 단순노무직(5.6%) 순이다. 종사자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42.0%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5.9%로 규모별 격차가 크다. 노조유무별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장기근속자가 49.7%인데 비조합원은 33.3%이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비조합원은 10.9%다. 정규직(31.2%)과 비정규직(4.6%), 정형근로(24.8%)와 비정형근로(5.2%), 상용직(27.3%)과 임시직(4.3%), 일용직(0.9%) 사이에 근속년수 격차도 크다. 임금계층별로 고임금계층은 장기근속자가 절반가량인데, 저임금 계층은 3%대에 지나지 않는다.
-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여자(41.3%)가 남자(31.9%)보다 많고, 연령계층별로는 25세 미만(76.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5세 이상(46.3%)이 많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54.6%)가 가장 많고 대졸이상(21.8%)이 가장 적다. 산업별로 기타재화생산(58.1%)과 개인서

비스업(52.5%)은 절반 이상이 단기근속자이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58.9%), 서비스판매직(44.7%) 순으로 많다. 종사자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54.9%)은 절반 이상이 단기근속자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로 규모별 격차가 크다. 노조유무별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단기근속자가 6.5%인데 비조합원은 25.7%이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비조합원은 41.9%다. 정규직(16.3%)과 비정규직(56.0%), 정형근로(24.9%)와 비정형근로(57.1%), 상용직(18.6%)과 임시직(53.0%), 일용직(92.1%) 사이에 격차는 매우 크다. 임금계층별로 저임금계층은 단기근속자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고임금 계층은 9~11% 정도다.

<표4> 인적속성과 일자리속성별 근속년수 평균과 분포(2011년 8월 현재)

		근속년수		분포(%)					
		평균 값	중위 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5.10	2.00	35.9	13.6	7.6	11.0	13.7	18.0
성별	남자	6.20	2.92	31.9	11.8	6.7	11.2	14.7	23.6
	여자	3.62	1.42	41.3	16.1	8.8	10.8	12.4	10.6
혼인	미혼	2.29	1.08	47.7	18.2	9.3	11.5	9.5	3.7
	기혼	6.22	3.00	31.2	11.8	6.9	10.8	15.4	23.8
성별 혼인	미혼남자	2.24	1.08	48.3	18.0	8.7	11.8	9.6	3.7
	기혼남자	7.67	4.42	25.8	9.5	6.0	11.0	16.7	31.0
	미혼여자	2.35	1.17	46.9	18.5	10.1	11.2	9.5	3.8
	기혼여자	4.17	1.58	38.9	15.0	8.2	10.6	13.7	13.6
가구주 관계	가구주	6.73	3.42	28.6	11.5	6.9	11.2	15.8	26.1
	배우자	4.33	1.75	37.5	14.5	7.9	11.0	14.9	14.2
	기타가구원	2.07	.92	51.1	17.8	8.9	10.8	8.2	3.2
연령 계층	25세미만	.71	.33	76.2	14.3	5.3	3.3	1.0	
	25-34세	2.92	1.92	32.5	18.7	10.7	17.1	17.7	3.3
	35-44세	5.94	3.42	27.1	12.3	7.2	10.7	16.5	26.2
	45-54세	7.79	3.42	30.6	10.7	6.2	8.4	13.2	30.8
	55세이상	5.57	1.25	46.3	11.1	5.9	8.6	8.9	19.2

학력	중졸이하	3.19	.67	54.6	11.2	6.4	7.5	9.6	10.6
	고졸	4.86	1.83	36.6	15.1	8.1	10.9	12.5	16.8
	전문대졸	4.51	2.25	31.4	15.9	9.2	13.8	15.6	14.1
	대졸이상	7.18	4.08	21.8	12.7	7.5	12.8	17.9	27.3
	재학휴학중	1.04	.17	78.8	9.8	3.7	2.9	2.4	2.4
산업	제조업	5.80	3.08	27.2	13.9	7.9	12.8	17.4	20.8
	기타재화생산	3.20	.42	58.1	8.8	5.2	7.4	8.6	11.8
	생산서비스업	5.08	2.42	30.4	15.5	8.5	13.8	14.5	17.3
	유통서비스업	4.71	2.17	33.1	15.1	8.5	11.2	15.5	16.5
	개인서비스업	2.91	.83	52.5	14.5	6.4	8.4	9.5	8.7
	사회서비스업	7.06	2.83	30.9	12.2	7.6	10.2	12.9	26.2
직업	관리전문직	6.50	3.25	25.3	14.3	8.6	12.7	15.5	23.5
	사무직	7.19	4.25	21.3	12.7	7.0	13.0	18.7	27.3
	서비스판매직	3.37	1.25	44.7	16.0	8.7	9.8	10.6	10.2
	생산직	5.08	2.08	37.6	11.4	7.1	10.7	14.5	18.7
	단순노무직	2.18	.50	58.9	14.0	6.4	7.8	7.2	5.6
종사자 규모	1-4인	2.32	.67	54.9	15.6	7.3	9.0	7.3	5.9
	5-9인	2.99	1.17	47.0	16.0	8.0	10.1	10.4	8.5
	10-29인	4.52	1.83	37.5	13.9	8.3	11.6	13.8	15.0
	30-99인	6.45	3.42	26.1	13.0	8.2	1.7	17.6	23.4
	100-299인	7.06	4.25	20.6	12.5	7.2	13.7	19.0	27.0
	300인 이상	10.02	7.31	14.9	8.2	5.3	11.2	18.2	42.0
노조	무노조	3.59	1.42	41.9	15.1	8.3	11.3	12.6	10.9
	유노조비조합원	8.39	4.42	25.7	10.7	5.8	9.8	14.7	33.3
	유노조조합원	11.62	9.83	6.5	6.8	5.0	11.0	20.9	49.7
비정 규직	정규직	8.02	5.17	16.3	11.6	7.5	13.8	19.6	31.2
	비정규직	2.10	.67	56.0	15.7	7.7	8.2	7.8	4.6
비정형 근로	정형근로	6.60	3.42	24.9	13.3	8.0	12.5	16.5	24.8
	비정형근로	2.20	.58	57.1	14.2	6.9	8.2	8.4	5.2
종사상 지위	상용	7.27	4.25	18.6	13.2	8.3	13.9	18.7	27.3
	임시	2.12	.83	53.0	17.7	8.5	8.6	7.8	4.3
	일용	.42	.08	92.1	4.6	1.1	0.6	0.7	0.9
임금 계층 (월)	저임금계층	1.64	.42	63.2	14.4	6.5	6.7	5.9	3.4
	중간임금계층	3.66	1.83	35.2	16.9	9.5	13.6	14.9	9.9
	고임금계층	11.52	9.58	8.8	6.6	5.0	10.5	19.8	49.3
임금 계층	저임금계층	1.76	.50	61.1	15.3	6.6	6.9	6.4	3.6

(시간)	중간임금계층	3.44	1.58	37.5	16.7	9.5	13.2	14.1	9.0
	고임금계층	10.52	8.25	11.0	7.7	5.7	11.5	19.8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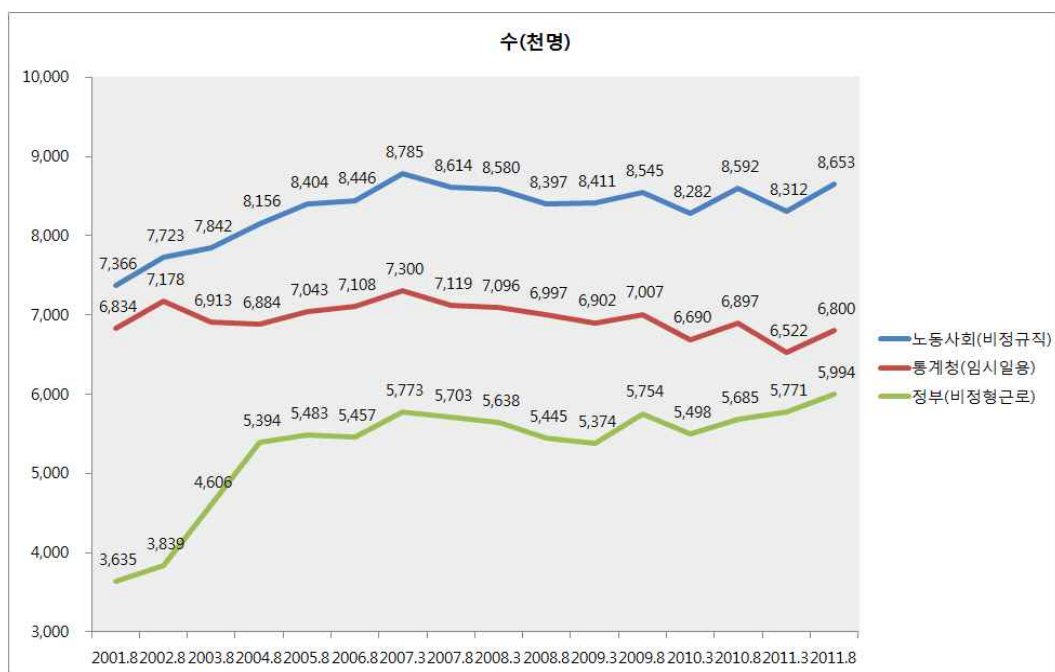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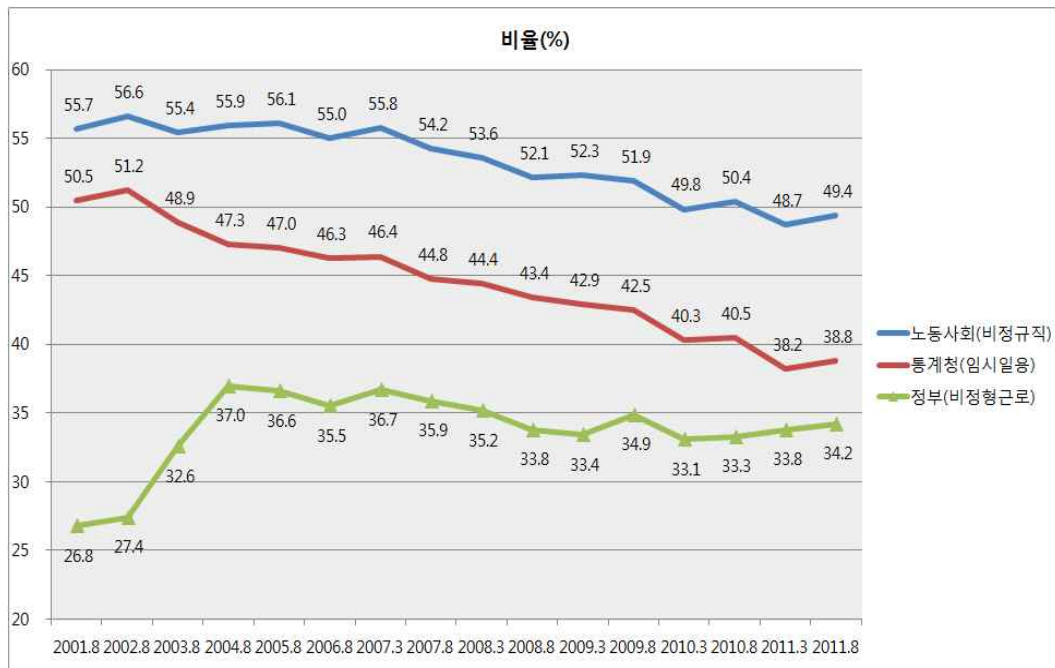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1년 8월

2. 비정규직

○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99만 명(34.2%)으로 추정하고, 노동사회연구소는 865만 명(49.4%)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 노동사회연구소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55.8%)부터 2011년 8월(49.4%)까지 4년 반 동안 6.4%p 감소했다.
-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0년 3월(33.1%)까지 3년 동안 3.6%p 감소했다. 하지만 그 뒤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8월에는 34.2%로 1년 반 만에 1.1%p 증가했다.

<그림8> 비정규직 규모 추이



- 정부와 노동사회연구소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3>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70만 명(①)이 실체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임시·일용직은 일제 식민통치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80만 명(38.8%)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85만 명(10.6%)을 합쳐 865만 명(49.4%)으로 추계하고 있다(<표5>에서 ①+②+③).

<표5>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1년 8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8,857(50.6)	① 2,701(15.4)	①+④ 11,558(66.0)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1,853(10.6)	② 4,099(23.4)	②+③ 5,952(34.0)
	소계		③+④ 10,710(61.2)	①+② 6,800(38.8)	17,510(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 임시일용직 가운데 270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정부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도저히 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없다.
- 저임금계층이 136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55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6,600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9.5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8.5%)와 중졸이하(22.5%)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6~30%,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9~32%로 매우 낮다. 주 5일제 실시는 19.7%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1.4%로 가장 낮다.

<표6>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0년8월				2011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 (천 명)	2,914	3,983	1,695	8,455	2,701	4,099	1,853	8,857
(%)	17.1	23.4	9.9	49.6	15.4	23.4	10.6	50.6
저임금계층 (천 명)	1,451	2,073	442	550	1,364	2,241	465	606
최저임금미만(천 명)	591	1,112	143	112	545	1,101	145	109
월 평균임금 (만 원)	133	100	170	266	138	106	182	272
시간당 임금 (원)	6,259	6,485	9,237	14,401	6,600	7,095	10,188	14,831
주노동시간 (시간)	50.1	36.9	44.8	43.9	49.5	36.2	43.5	43.5
근속년수 (년)	1.98	1.24	3.20	8.08	2.2	1.3	3.7	8.0
기혼여자비율 (%)	39.1	44.2	31.8	19.6	38.5	43.1	34.7	19.8
중졸이하비율 (%)	23.0	31.6	17.6	5.2	22.5	31.0	16.6	5.4
국민연금적용 (%)	26.9	13.9	85.6	98.0	25.8	12.9	83.9	97.3
건강보험적용 (%)	28.8	16.5	93.5	98.8	28.7	16.8	95.2	98.6
고용보험적용 (%)	27.7	17.0	87.3	83.0	29.5	17.8	84.9	82.8
퇴직금적용 (%)	16.0	6.5	95.3	99.5	16.1	7.6	96.2	99.4
상여금적용 (%)	29.6	9.7	87.3	98.1	31.9	11.0	80.7	96.8
시간외수당적용 (%)	8.7	5.8	54.1	73.1	9.3	7.3	48.5	70.1
유급휴가 (%)	11.8	7.2	86.1	93.7	10.8	6.7	75.3	88.5
근로계약서면 작성	15.9	28.9	92.1	59.6	18.0	30.3	90.9	61.4
주5일근무제 (%)	17.7	26.8	59.1	68.0	19.7	32.5	67.8	70.6
교육훈련경험 (%)	9.8	17.8	36.9	43.6	11.4	20.6	40.9	48.6

- 이처럼 노동시장 내 최하위 계층인 ‘정형-임시일용(①)’ 집단을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정부는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규모가 많은가, 적은가에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규모의 증감 추이와 원인 진단이 달라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 실태를 왜곡 축소하게 된다.

- 노동사회연구소 분류방식에 따르면 저임금 계층(시간당 임금 기준)은 정규직이 61만 명(13.0%)이고 비정규직이 407만 명(87.0%)으로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 분류방식에 따르면 정형근로가 208만 명(44.5%)이고 비정형근로가 259만 명(55.5%)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저임금계층의 절반을 차지한다.
- 노동사회연구소 분류방식에 따르면 중졸이하 저학력층은 정규직이 48만 명(18.1%)이고 비정규직이 216만 명(81.9%)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정부 분류방식에 따르면 정형근로가 111만 명(42.0%), 비정형근로가 153만 명(58.0%)이다.

<표7>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구성 차이

		임노동자	노동사회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정형근로	비정형근로
수 (천명)	전체	17,510	8,857	8,653	11,515	5,994
	저임금계층(월)	4,570	441	4,129	1,574	2,996
	저임금계층(시간)	4,675	606	4,069	2,081	2,594
	최저임금 미달	1,899	109	1,791	709	1,190
	기혼여자	5,199	1,752	3,447	2,785	2,414
	중졸이하	2,636	478	2,158	1,106	1,530
비율 (%)	전체	100.0	50.6	49.4	65.8	34.2
	저임금계층(월)	100.0	9.6	90.4	34.4	65.6
	저임금계층(시간)	100.0	13.0	87.0	44.5	55.5
	최저임금 미달	100.0	5.7	94.3	37.3	62.7
	기혼여자	100.0	33.7	66.3	53.6	46.4
	중졸이하	100.0	18.1	81.9	42.0	58.0

- 노동사회연구소 분류방식에 따르면 월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72만 원이고 비정규직은 132만 원으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8.6%다. 하지만 정부 분류방식에 따르면 정형근로 임금은 239만 원이고 비정형근로 임금은 135만 원으로, 정형근로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형근로 임금은 56.4%다.

<표8>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임금격차

		임노동자	노동사회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정형근로	비정형근로
금액	월임금총액(만원)	203	272	132	239	135
	시간당임금(원)	11,259	14,831	7,603	12,776	8,346
격차	월임금총액		100.0	48.6	100.0	56.4
	시간당임금		100.0	51.3	100.0	65.3

-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정부 분류방식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정형근로와 비정형근로 등 3가지 분류방식에 따른 통계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임금

- 임금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현재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조사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3년 4월부터 매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
 - 1999년 3월부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 확대
 - 2008년 3월부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서, 조사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변경하고, 조사명칭을 ‘사업체임금근로 시간조사’로 변경.
 - 2011년 1월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고, 조사명칭을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
- 하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부문만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을 뿐, 근로실태부문(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은 ‘민간부문 5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들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임금수준이 과대평가되는 측면과, 정부부문 종사자들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임금수준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 사업체 단위로 임금수준 평균값을 집계하는 것이어서 임금불평등이나 임금분포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산업별,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수준 평균값의 비교는 가능하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부는 매년 6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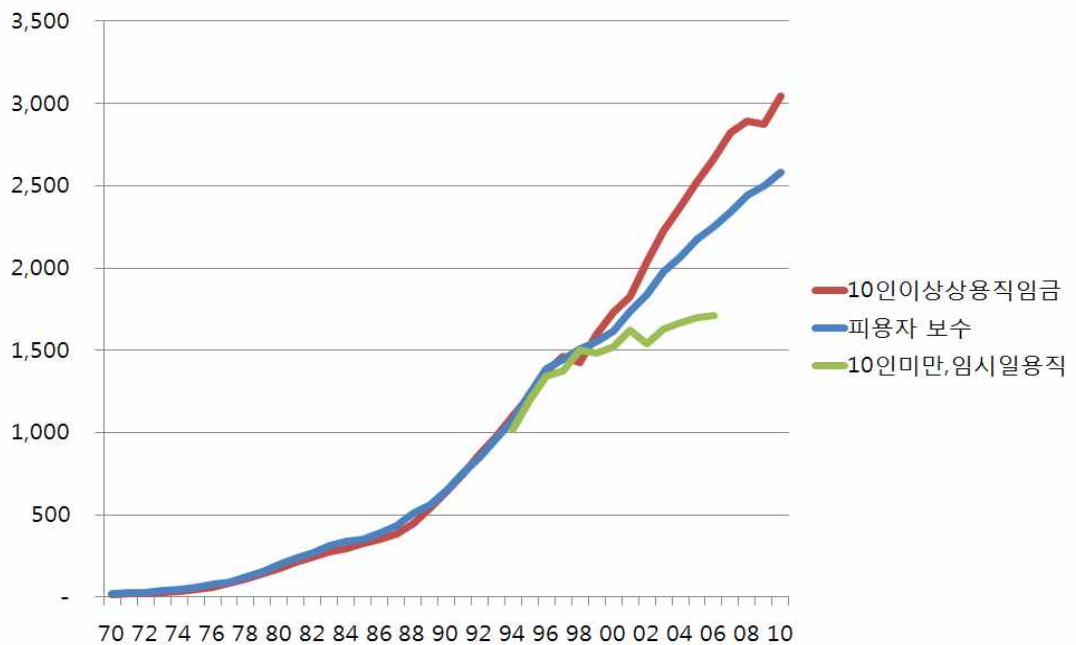
- 이 조사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불평등이나 임금분포를 파악하는데는 활용할 수 있으나, 6월 기준 연 1회 조사이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 노동정책과 사회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그에 적합한 고용통계와 임금통계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조사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이외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은 1963년부터 분기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다가, 1982년 7월부터 매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00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관련 조사항목이 없지만,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월 임금총액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임금관련 항목을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매달 임금수준과 임금불평등, 임금분포 등의 조사결과를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정부부문과 5인 미만 사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부문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까지 조사대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임금수준 비교와, 저임금계층과 임금불평등 추계가 가능해진다. 물론 가구조사의 속성상 임금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은 남는다.
- 국민소득 통계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눈 피용자 1인당 보수총액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OECD는 각국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 피용자 보수총액(국민소득 계정에서 임금총액을 구한 뒤 전체 노동자수로 나누어 구함)을 전체 경제를 대표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OECD가 매년 발간하는 Employment Outlook 부록 통계표 J 참조).
- 이들 통계를 사용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계산한 피용자 1인당 월 보수총액과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구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임금총액이 거의 일치했다(<그림 9> 참조).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즉 피용자 1인당 월 보수총액은 2000년 162만원, 2005년 218만원, 2010년 258만원인데,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임금총액은 각각 173만원, 253만원, 305만원이어서, 격차가 각각 11만원, 35만원, 47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10인 미만 사

업체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월 임금총액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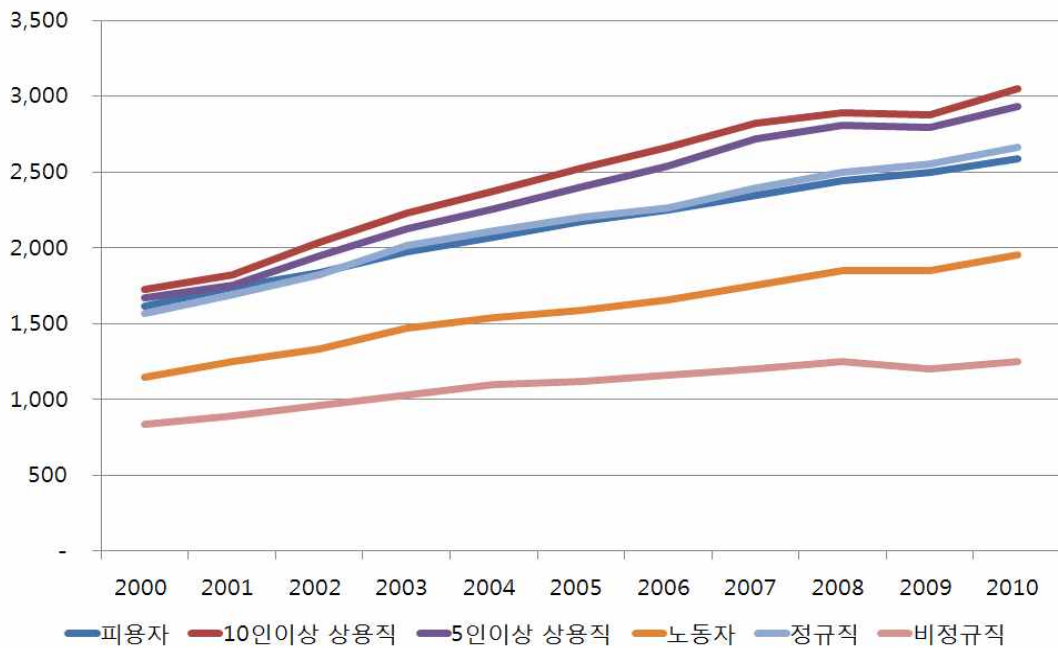
<그림9> 피용자보수와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추이 비교(단위: 천원)



- 둘째, <그림10>과 <표9>, <표10>에서 연도별 임금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2010년 305만원)과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293만원)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규직 임금(266만원)과 국민소득 통계에서 피용자 보수총액(258만원)이 거의 같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자 임금(195만원)과 비정규직 임금(125만원)은 뚝 떨어진다. 따라서 2010년 피용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부 임금통계는 실제 임

금수준보다 13~18% 과대평가하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5%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10> 연도별 임금수준 추이(단위: 천원)



<표9> 연도별 임금수준 추이(단위: 천원)

연도	한국은행 피용자 보수총액	노동부				통계청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임금총액	임금총액
2000	1,617	1,727	1,196	1,668	1,182	1,150	1,570	840
2001	1,737	1,825	1,274	1,752	1,257	1,250	1,694	891
2002	1,839	2,036	1,436	1,948	1,408	1,330	1,820	960
2003	1,975	2,228	1,567	2,127	1,532	1,470	2,014	1,026
2004	2,068	2,373	1,677	2,255	1,636	1,540	2,110	1,095
2005	2,177	2,525	1,795	2,404	1,756	1,590	2,199	1,120
2006	2,251	2,667	1,918	2,542	1,874	1,660	2,262	1,160
2007	2,343	2,823	2,047	2,716	2,026	1,750	2,393	1,199
2008	2,441	2,891	2,207	2,810	2,154	1,850	2,499	1,247

2009	2,497	2,875	2,220	2,795	2,166	1,850	2,550	1,204
2010	2,584	3,046	2,322	2,931	2,264	1,950	2,661	1,249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표10> 피용자 보수총액 대비 통계별 임금수준 추이
(피용자 보수총액=100, 단위: %)

연도	한국은행 피용자 보수총액	노동부				통계청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임금총액	임금총액
2000	100.0	106.8	73.9	103.1	73.1	71.1	97.1	51.9
2001	100.0	105.1	73.4	100.9	72.4	72.0	97.5	51.3
2002	100.0	110.7	78.1	105.9	76.6	72.3	99.0	52.2
2003	100.0	112.8	79.3	107.7	77.6	74.4	102.0	52.0
2004	100.0	114.7	81.1	109.0	79.1	74.5	102.0	53.0
2005	100.0	116.0	82.5	110.5	80.7	73.0	101.0	51.5
2006	100.0	118.4	85.2	112.9	83.2	73.7	100.5	51.5
2007	100.0	120.5	87.4	115.9	86.5	74.7	102.1	51.2
2008	100.0	118.4	90.4	115.1	88.2	75.8	102.4	51.1
2009	100.0	115.1	88.9	111.9	86.8	74.1	102.1	48.2
2010	100.0	117.9	89.9	113.4	87.6	75.5	103.0	48.3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 셋째, 요즈음은 임금불평등 지표로 지니계수보다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p9010)을 많이 사용하고, ‘중위임금의 2/3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분류한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이들 지표를 계산할 수 없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이들 지표를 모두 계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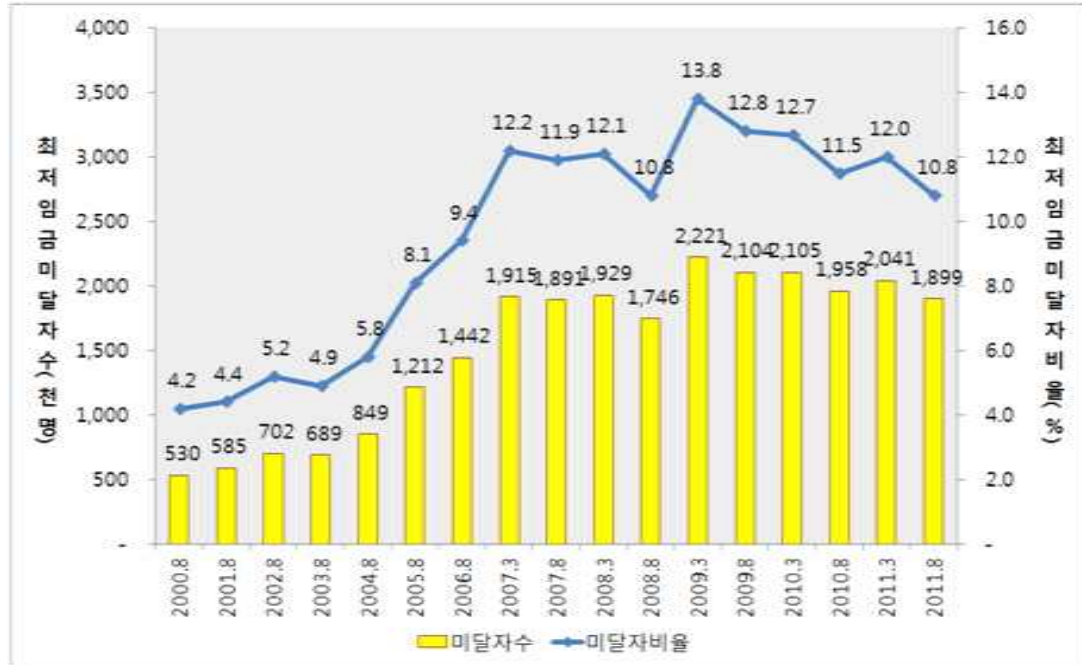
- 2011년 8월 현재 임금불평등은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4배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1배다. 저임금계층은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26.1%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6.7%다.

<그림11>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추이



- 이밖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는 190만 명(10.8%)으로, 노동자 9명 중 한 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그림12> 참조).

<그림12>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표11>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추이

조사연월	임금불평등(P9010,배)		저임금계층 비율(%)		최저임금 미달	
	월임금	시간당임금	월임금	시간당임금	비율(%)	수(천명)
					시간당임금	
2000.8	4.44	4.94			4.2	530
2001.8	4.60	4.81	21.5	23.1	4.4	585
2002.8	5.00	4.91	23.5	24.1	5.2	702
2003.8	5.09	5.10	21.6	27.5	4.9	689
2004.8	5.00	5.16	25.9	26.7	5.8	849
2005.8	5.00	5.40	24.8	26.6	8.1	1,212
2006.8	5.00	5.40	26.2	25.8	9.4	1,442
2007.3	5.17	5.25	25.1	23.3	12.2	1,915
2007.8	5.16	5.17	25.7	27.4	11.9	1,891
2008.3	4.86	5.33	22.7	26.7	12.1	1,929
2008.8	5.00	5.14	21.2	26.8	10.8	1,746
2009.3	5.00	5.21	21.5	26.5	13.8	2,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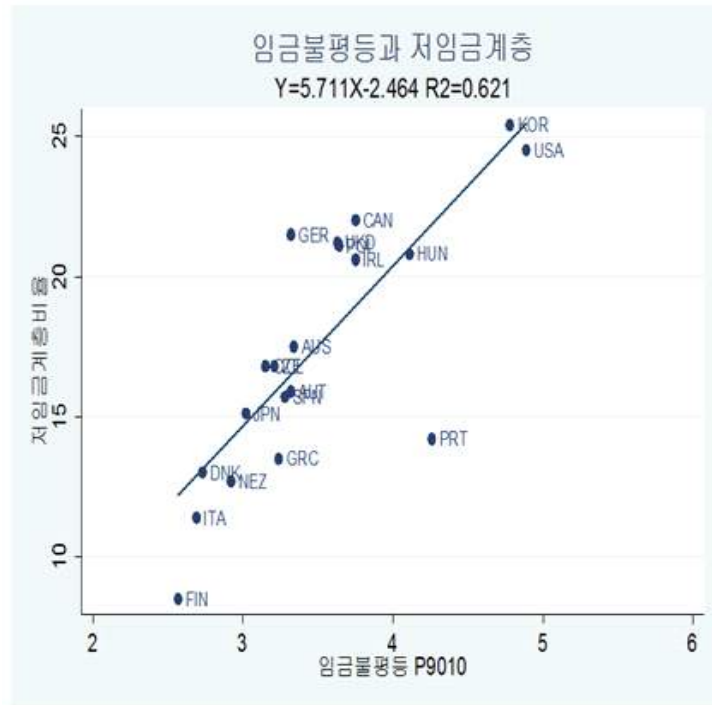
2009.8	5.38	5.25	22.8	27.3	12.8	2,104
2010.3	5.45	5.25	27.0	26.5	12.7	2,105
2010.8	5.14	5.25	26.7	26.5	11.5	1,958
2011.3	5.43	5.27	24.8	28.1	12.0	2,041
2011.8	5.43	5.07	26.1	26.7	10.8	1,8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그림13>은 OECD 회원국의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금불평등이 높을수록 저임금계층이 많다.

- 한국과 미국은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다. 이에 비해 핀란드, 이태리, 덴마크, 뉴질랜드는 임금불평등이 2배 안팎으로 가장 덜 심하고 저임금계층도 가장 적다.

<그림13>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이외에 다음 2가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첫째,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임금관련 항목 추가 조사.
- 둘째,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소득 통계에서 1인당 피용자보수총액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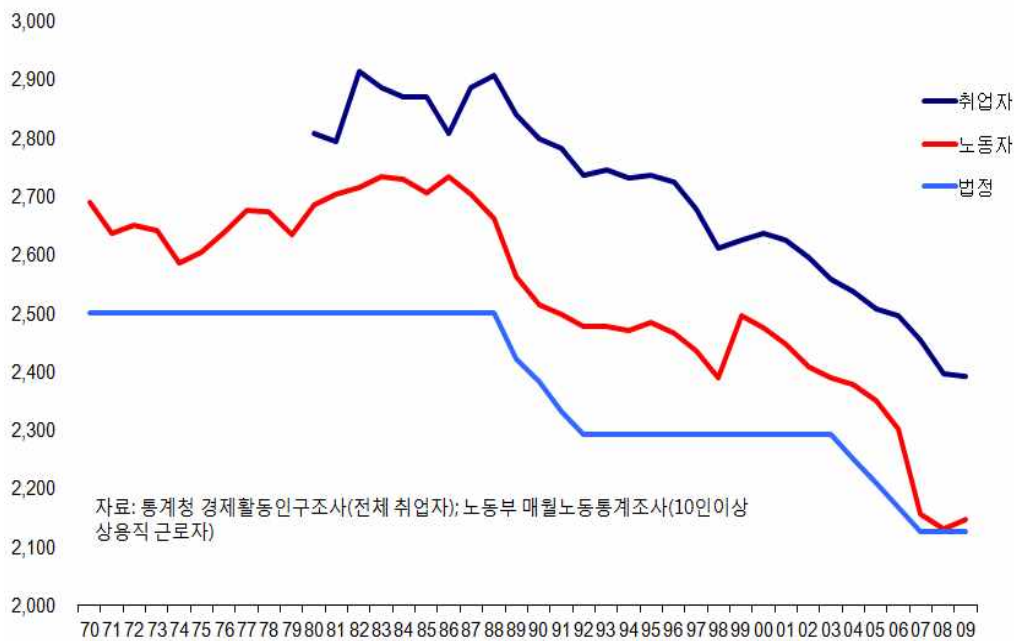
4. 노동시간

○ 노동시간에 관한 공식 통계는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 통계조사)에서 10인 이상(또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근로시간

평균값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1~17시간, 18~35시간, 36~44시간, 45~53시간, 54시간 이상)가 사용되고 있다.
- <그림14>는 전체 취업자와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연간 노동시간 추이를 그린 것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맞물려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4> 연간 노동시간 추이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노동자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표12>에서 알 수 있듯이 2009~10년 두 해를 제외하

면 오히려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취업자보다 길었다.

<표12> 주당 노동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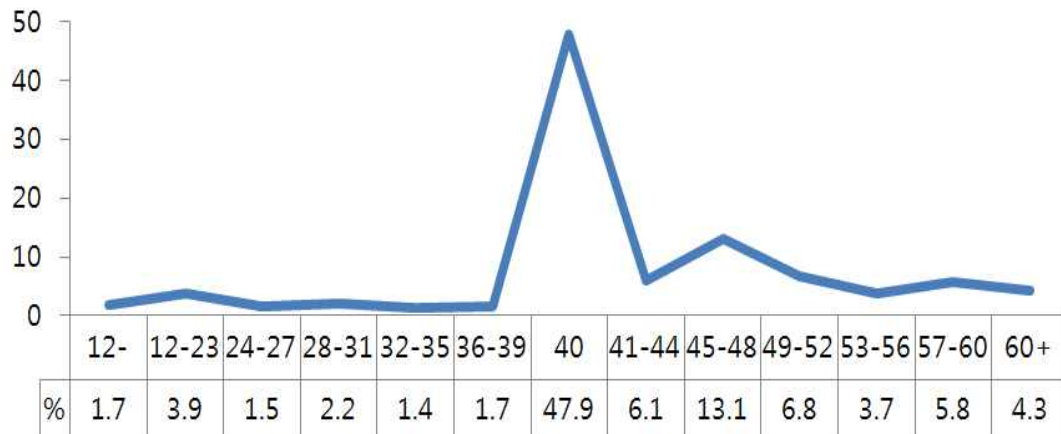
연월	취업자	노동자	취업자-노동자
2001.8	48.0	49.3	-1.3
2002.8	46.4	49.2	-2.8
2003.8	45.2	48.5	-3.3
2004.8	47.7	47.8	-0.1
2005.8	45.8	47.5	-1.7
2006.8	45.4	46.6	-1.2
2007.8	44.1	45.9	-1.8
2008.8	43.8	45.1	-1.3
2009.8	44.3	43.9	0.4
2010.8	44.6	43.4	1.2
2011.8	42.0	42.7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노동시간 평균 이외에 노동시간 분포를 이용하면 실태 파악 및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주당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음에도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361만 명(20.6%)에 이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람도 241만 명(13.8%)에 이르고 있다(<그림15> 참조). 이밖에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노동시간 실태 등 유용한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림15> 주당 노동시간 분포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1년 8월)



○ 결론적으로 노동시간 통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취업자를 좀 더 세분해서 임금노동자(상용, 임시, 일용; 정규직, 비정규직)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사상 지위별 노동시간 통계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밖에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노동시간 통계도 필요하고, 평균값 이외에 중위값과 분포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고용의 양과 질(종합지표)

-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ILO의 관심사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자체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의 양은 고용의 질과 분리될 수 없다”라 하여,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중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지 않거나 널리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일면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00년대 들어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내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KLI)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등은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를 산출하려면 어떤 측정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각 측정지표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표13>은 ILO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산출할 때 사용한 측정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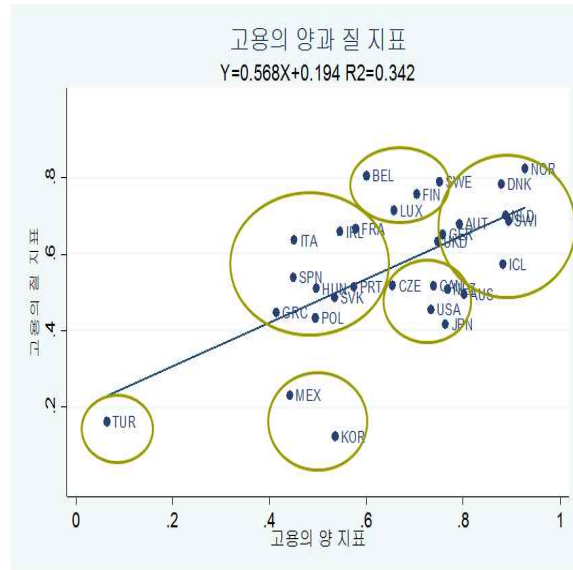
<표13> 항목별 측정지표

	ILO Anker et al.(2003)	KLI 방하남외(2007)	KLSI 김유선(2010)
1.고용의 양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비농임금근로자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부문 임금고용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연간 고용변화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임노동자비율
2.고용안정	근속1년 미만 비율 임시직 비율	근속1년 미만 비율 이직률/평균근속연수 임시직 비율 공공부문종사자비중	장기근속자 비율(10년 이상), 단기근속자 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 근속년수평균 임시직 비율,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3.임금	저임근로자비율(중간임금 1/2), 산업별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고용비율; 빈곤율, 지니계수, 주요 직종 평균소득	연간임금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금2/3미만)
4. 노동시간	지나친 장시간 노동 비율, 불완전 고용률	장시간 근로 비율, 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율, 주당평균근로시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연간노동시간
5. 산업재해	산재사상률(10만명당) 근로감독관수 (10만명당), 산재보험적용률	산재발생률, 산재강도율, 10만명당 치명적 부상빈도, 10만명당 근로감독관	중대재해율
6. 고용평등	성별 직업분리 여성 관리행정직 비율	비농부문중여성위주직종의고용비율, 관리직/고위직여성비율, 고령자 고용률 갭,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갭, 남녀 시간당 소득비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7. 노사관계	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 파업직장폐쇄	노조조직률, 단체교섭 적용률, 파업과 직장폐쇄 빈도, 노조조직률변화율	노조 조직률
8.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적지출 현금소득 공적지원 65세이상연금수령자비	실업급여 수급률 산업재해 적용률 65세이상연금수급자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복지지출(공공+법정민간), 적극적 노동시

	율, 연금기여경제활동 인구비율, 월평균연금 액(중간/최저소득대비)	율, GDP대비공공사회 보장지출, GDP 대비 공적 현금소득보전지출 액 비중 등	장 지출, 실업지출
--	--	---	------------

- 참고로 김유선외(2010)가 OECD 30개 회원국의 고용의 양과 질 종합 지표를 산출해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상관계수가 0.568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로 중하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30위로 최하위다. 한국은 회귀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일종의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다.
-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노르딕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 국가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하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 다. 일본은 앵글로 색슨 국가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한국과 멕시코, 터키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가장 열악하다. 한국은 고용의 양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이나 남부유럽과 유사하지만, 고용의 질은 가장 낮다. 한국은 남부유럽이나 앵글로색슨보다 고용의 질이 크게 떨어지며, 멕시코와 가장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16>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



제5장 맺는 말 - 요약과 제언

- 제2장에서는 고용의 양, 제3장에서는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공식 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 제4장에서는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의 개발과 활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불신은 널리 형성되어 있다. 공식 실업률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1) 고용률의 활용 폭을 넓히고, (2)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 실업률을 추계함과 더불어,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설문구조 변경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근속년수 평균값을 주로 사용하지만, 근속년수 중위값과 장기 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로 활용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서 비정규직 통계는 3가지 방식으로 추계되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노동사회연구소는 865만 명(49.4%), 정부는 599만 명(34.2%)으로 추계하고, 임시일용직은 680만 명(38.8%)로 추정된다. 정부 측 분류방식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정형근로와 비정형근로 등 3가지 분류방식에 따른 통계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임금관련 문항을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매달 임금수준과 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임금분포 등의 조사결과를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통계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눈 피용자 1인당 보수총액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시간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 종사상 지위별 노동시간 통계를 제공하고, 평균값 이외에 중위값, 노동시간 분포 등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는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데 비해, 고용의 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 종합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유선(2010), “KLSI 고용지표: OECD 국가 비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20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황수경(2011),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KDI.
-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 통계청, KOSIS.
- stats.oecd.org